전남 지자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정부,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해 '공동도급' 방식 확대 전남은 해마다 대폭 감소…서울·부산 100% 추진과 대조적

적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 되지 않도록 공공 공사에서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하기 로 했다

이 제도는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 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계약자'로 지정해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기존 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 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정거래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을 보면, 2015년 55건·882억원에서 2016년 61건·652억원, 2017년 24건 549억원, 지난해 22건 376억원으로 4년 사이에 발주액이 57.4% 줄었다. 올해에도 지난 20일 현재 11건 8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도 발주액은 2017년 444억원 (8건) 에서 지난해 202억원 (3건)으로 반토막났 고, 올해는 1건도 없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목포시, 구례군, 무안 군, 영암군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주계 약자 공동도급을 발주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하도급 불공정

■전남 지자체 공동도급 발주 현황



역주의도 저해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 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자료: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공동도급 발주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공주체인 전문건설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공사목적물의 완성 도를 높일 수 있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야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 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순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며 "업역 규제·업종체계 개편과 직접 시공 범위확대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LH, 공임단지 기술교류 보수사례발표회

대책의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어서 대조

전문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이유를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과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 담당자들의 단

순 업무량이 크게 늘어 꺼린다는 것이다.

또 종합건설업체를 우선하는 오랜 도급 관

행과 기초단체의 경우 친분과 인맥 등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인철)는 지난 28일 광주 시 남구 효천2지구 천년나무 6단지에서 LH 공공임대 7개 단지 관리소 직원들

과 함께 기술교류를 위한 보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했다. 발표회는 LH, 관리소, 임차인대표회의 간 기술 교류 및 공동주택 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LH 광주전남본부 제공〉

"주택매매가 하향 안정세 지속"…감정원, 전망치 $-1.0 \rightarrow -1.4\%$ 하향

전셋값도 하락세…매매거래량 72만건 역대 최저 전망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시장 매매 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1.0%에서 -1.4% 로 수정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부 동한 시장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이같이 내 놨다.

감정원은 매년초 부동산시장 전망치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수정 전망치를 한번 더 발표하는데 올해 주택매매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화가 이어져 당초 예상보다 낙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정원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 산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간택 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3기 신도시 주택공 급 방안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

책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정원이 예측한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연초 예상한 -0.5%에서 -1.2%로 0.7%포인트 낙폭이커질 전망이다. 지방은 연초 예상치(-1.8%)와 유사한 -1.9%로 분석됐다.

감정원은 "실수요가 풍부한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은 안정세이지만 지방은 지역 시장 위축 및 입주물량 축적으로 매매가격 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0월 적용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제도 변수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급 이 줄면서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 단했다.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자 시장이 불안정성을 나타냈다"면서도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경기지역에 공급이 더 많고 예정된 물량도 많다. 풍선효과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분양 단지 인근 집값이 덩달아 뛰는 현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전국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2.6%로 전망했다. 연초 전망치(-2.4%)

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로 연초 전 망치(-2.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지방은 -2.6% 수준으로 전망치(-2.7%) 대비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감정원은 "임대시장은 각종 규제와 불확설성 확대로 매매시장이 하락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매매 대기수요의 증가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전반적인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지속할 전 망이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기준 매매거래량을 72만건으로 예상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종전 연간 최저거래량은 2012년(73만 5414건)으로, 연초 예상치(81만 건)보다 10만 건가량 낮고, 전년 거래량(86만 건)보다약 16% 적은 수준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낙후된 순천 청수골 '새뜰마을'로 거듭난다

생활인프라·돌봄 일자리 등 지원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

주거환경이 열악한 순천 청수골이 정 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해 '새 뜰마을'로 거듭난다. 이 곳에서는 협동 조합이 과자를 판매하고 마을식당 운영 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신한희망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과 함께 올해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 지역 4곳을 선정하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순천 청수골 ▲부 산 사상 새밭마을 ▲세종 조치원 침산마 을 ▲경남 진주 옥봉마을 등이다. 정부 가 도시내 주거환경 열악지역으로 지정 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을 대상 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지역마다 설립된 협동조 합을 통해 각각 어린이 돌봄 등 교육사 업이나 마을 게스트 하우스, 과자 제조· 판매, 로컬푸드 마을식당 등을 운영하 게 된다. 특히 순천 '청수정 협동조합' 은 마을식당 운영과 함께 과자를 제조· 판매해 마을 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창출한다.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국비 지원과 포용적 금융, 사회공헌기금 기부,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 수익창출과 자생을 도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공 공이 함께 주민조직을 도와 정부지원 이 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 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을 더욱 꼼 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다음달 5~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 간제안사업참가의향서를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 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 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 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

정 비율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000 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추가 로모집한다. 11월 7~12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다. 앞서 2월과 5월 실시한 1·2차 공모 를 통해 약 5000가구를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 증,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지원을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7월 광주·전남 주택 인허가 1897건···전년비 76%↓

광주 1125호·전남 772호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7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누적 으로는 광주는 감소했고, 전남은 소폭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총 1897건으로, 전년동월(7907호)대비 76% 감소했다. 광주 1125호, 전남 772 호로, 전년동월대비 79.3%, 68.8% 줄 었다.

1~7월 누적으로 보면 광주는 9299호로 전년 같은 기간 1만851호보다 14.3%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1만84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3호)보다 1.4% 증가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광주 2246 호로 전년 동월(775호) 대비 189.8% 폭증했다. 전남은 2395호로 62.4% 늘 었다.

올들어 7월까지 광주지역에서는 7506호의 주택이 착공됐고, 전남은 1만 1384호가 착공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매수자 제시 요망(9월10일까지)

문의, 010-3605-5000